

230만 촛불에 놀란 與비주류 靑 면담 거부·탄핵 참여 선회

탄핵 운명 가를 3대 변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오는 9일 표결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안개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관심사는 탄핵안이 가결정족수(재적의원 300명중 200명)를 채울 수 있느냐 여부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이 172명이어서 새누리당에서 최소 28명이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

정치권은 탄핵이 가결되면 부결되는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이번 탄핵안 처리에 변수가 되는 부분을 들여다보며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朴, 4월 퇴진 표명 여부**=새누리당 비주류는 지난주 '4월말 퇴진-6월말 대선'을 제안하며 탄핵 추진에서 발을 뻗듯한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이 4월에 자진해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만 밝힌다면 굳이 탄핵이 필요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또 탄핵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도 헌재가 법적 다툼이 있는 사항을 판단하느라 권고 규정인 6개월의 심리 기간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 오히려 자진 사퇴보다 못할 수 있다는 게 비주류 의원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이런 비주류의 입장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제3차 담화보다 한 발 더 나간 입장이 이번 주 내에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탄핵 정국' 주간 일정

5일 월요일	6일 화요일	7일 수요일	8일 목요일	9일 금요일
●국정조사 특위 2차 기관 보고 청와대 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1차 청문회 이재준 정동구 최태원 구본무 김승연 손경식 조양호 신동빈 허정수 등 재발 총수 증인	●2차 청문회 최순실 차은택 김기춘 안종범 유병우 조원동 정호성 안병근 이재만 김 중 등 국정농단 관련자 ●새누리 비상시국위 요구 박 대통령 답변 시한 (내년 4월30일 퇴진과 즉각적인 2선 후퇴)	●탄핵안 국회본회의 보고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지난 3일에 발의)	●박 대통령 탄핵안 국회 표결

靑 “대통령 퇴진 여부 아직 정해진 것 없어”

퇴진 로드맵 여야 막판 협상은 어려울 듯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4일 “헌재 정해진 게 없다. 대통령이 여러 상황을 고심하고 계시니 지켜보자”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박 대통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4월 퇴진을 약속하면서 국회가 4월 퇴진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다시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이 역시 즉각 퇴진이나 무조건 퇴진이라는 국민과 야당 입장과는 상충돼 정국을 수습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있다.

◇**새누리 비주류 항방**=새누리당 비주류는 지난주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로 이미 균열상을 보이고 있다. 4월 퇴진 시한을

제시했던 김무성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면 탄핵까지 가는 데에는 부정적이다.

반면, 비주류의 또 다른 유력 정치인인 유승민 의원은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한다고 해도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탄핵 표결에 찬성하겠다는 강경론을 펴고 있다. 이처럼 비주류의 의원들이 반분되면서 탄핵안 가결 정족수 200명 충족에 대한 관측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이 불발되면 비주류는 진박과 함께 ‘폐족’ 위기에 빠질 것이란 전망도 있어 외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주말 촛불집회 이후 강경한 모습으로 바뀌

었다.

비상시국회의의 간사 황영철 의원은 4일 회의 직후 “정치권의 논란과 상관없이 박 대통령이 즉시 퇴임하라는 국민의 뜻은 한치 흔들림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며 “여야의 합의가 무산되면 9일 탄핵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면담에도 거부의를 뜻을 밝히고 야당 측에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 막판 협상 가능할까**=여당은 야당에 박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에 대한 협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야권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전격적인 여야 협상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야당이 정치적 타협으로 비치는 여당과 협상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 협상은 변수로서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일시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왼쪽)와 유승민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의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SK·롯데 360억 뇌물, 세월호 부실대응...헌법 11개항 위반

3野 '탄핵소추안' 내용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세 야당은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들은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위반한 것이며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을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위배 행위**=우선 최순실씨 일가에 의한 국정농단이 헌법 제1조인 국민주권주의, 67조 대의민주주의, 88조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66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씨가 고위공직 인사에 관여했고, 국무위원이 아닌 최씨에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도 미리 알려줘 영향력을 행사도록 했다”며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씨 등의 사익추구 도구로 만들고, 최씨

는 대통령 권력을 남용해 기업에서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최씨의 추천으로 임명하는 등 최씨를 비호하는 사람을 장·차관에 임명했다”며 헌법 7조인 직업공무원제도, 78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비서관 등을 통해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한 것 역시 헌법 23조인 재산권 보장, 제119조인 시장경제질서 유지 의무 조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야 3당은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역시 헌법 제10조인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률 위배 행위**=우선 야 3당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 가운데 일부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그룹·SK그룹·롯데그룹의 경우 구체적인 기업명을 적시했다. 이들은 3개 그룹의 모금 내용을 적시한 뒤 “이들 세 그룹에는 합병 의결권 행사, 특

별사면, 면세점 사업권 특허신청, 검찰수사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있었다”며 “이 세 그룹이 건넌 도합 360억원의 뇌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 3당은 미르재단에 16개 기업, K스포츠재단에 19개 기업이 기부금을 출연한 것은 직권남용·강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 최씨와 함께 기업들이 권력에 대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이용해 돈을 납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4월부터 한 달간 최씨가 실소유주인 플레그라운드가 현대자동차 광고를 70억원 상당 수주한 것, 포스코에 배드민턴팀, 펜싱팀, 태권도팀을 창단하고 매니지먼트를 최씨가 실소유주인 더블루케이가 담당토록 한 것 등이 직권남용·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청와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문서유출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탄핵안에 담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000만 촛불 대통령 끌어내릴 것”

3野 촛불민심 업고 비박계 표결 동참 총공세

“탄핵 부결 땀 민심 분노 국회로 향할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은 4일 전국에서 232만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한 전남 촛불집회와 관련, “촛불은 흔들리지 않는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야권은 또한, 오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부결되면 광화문 광장의 분노가 여의도 정치권으로 향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를 향해 탄핵안 표결 동참을 압박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민 마음속에 대통령의 임기는 이미 어제로 끝났다”

며 “더 버티면 1000만 촛불이 강제로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 대변인은 새누리당 비박계를 겨냥,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의 단맛에 빠져 모든 것을 잃는 바보 같은 짓을 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의 공범으로 남을 것인지, 국민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이날 정론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비박계의 탄핵 철회 움직임을 겨냥, “친박이든 비박이든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소명에 동참하고 국정 농단의 책임을 져야만 한다”며

“촛불민심을 배임하고 박 대통령과 민가를 도모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전국의 촛불은 질서있는 퇴진과 내년 4월 사임 등 꾀수로는 어렵다는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이라며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는 9일 탄핵으로 민심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반성과 사과를 담은 입장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끝없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면서 “여야가 마주 앉아 난국을 타개하고 국가를 안정시킬 해법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17년도 전기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비지원 FTA/국제무역전공 석·박사과정 모집

조선대학교 대학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FTA전문인력 양성기관입니다. 호남권(조선대학교) / 수도권(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인하대학교)

지원자 우대 및 합격자 특징

- 광주·전남 산업체 근무자 및 관련 공공기관 재직자 우대
- 합격자 전원 재학기간(4학기) 동안 협약기관특별장학금(수업료의 1/2)과 각종 학술장려금 지원
- 전일제 연구생은 수업료의 2/3 지원
- FTA 및 무역전문가 팀티칭 수업 실시, 국제학술대회 및 해외 현장실습 기회 부여
-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국제무역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 국내·외 기관 및 업체에 대한 인턴십 기회제공 및 취업알선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과정 15명(4학기) / 박사과정 5명(4학기)

수업시간 및 교육내용

- 수업은 **주중 야간**(19:00~) 및 **토요일**에 실시함
- FTA비즈니스모델, 무역경영 및 수출입실무, 원산지제도 외

지원자격

-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자

전형방법

- 특별전형(서류전형 및 면접)

·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이메일 사전접수	2016. 12. 1(목) 10:00 ~ 12. 16(금) 17:00	· fta.business@daum.net 으로 지원자 연락처(성명, 소속, 연락처) 송부
인터넷 원서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2016. 12. 19(월) 10:00 ~ 12. 28(수) 17:00	·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함 · 진학사어플라이 http://www.jinhak.com/ (콜센터 1544-7715)
입학지원서(출력본) 및 서류제출	2016. 12. 20(화) 10:00 ~ 12. 28(수) 17:00	· 인터넷 접수 후 아래의 주소로 송부 또는 방문 접수 (우)61452 광주광역시 동구 월문대로 309(서석동) 조선대학교 대학원 교학팀

※ 구술시험(면접),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일정은 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지

모집요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및 FTA비즈니스학과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 FTA비즈니스학과 062)230-7283 대학원 062)230-6401



조선대학교 대학원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